

[발표 3]

영국의 복지유형과 의식의 괴리 - 그 기원과 시사점 -

유범상, 이현숙(에딘버러대 박사과정)

1. 연구물음과 관점

본 연구는 80년대 이후 영국에서 복지국가유형과 복지의식 간에 괴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그 기원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시말해, 현재 영국의 복지국가유형은 앵글로 색슨 모델, 즉 잔여적 또는 자유주의적 복지모델로 규정되는 데 비해, 영국인들은 제도적 또는 사회민주주의적 복지유형에 상응하는 복지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 괴리의 실재를 확인하고 그 괴리의 기원을 밝히고자 한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본 연구는 지배계급의 지적, 도덕적, 정치적 지도력을 의미하는 그람시의 헤게모니(1971)와 이러한 헤게모니를 특정 국면에 존재하는 보다 구체적인 전략과 프로젝트로 개념화한 제습(1988; 1990)의 헤게모니 프로젝트 개념이 복지의식 분석에 중요한 통찰을 제시한다고 본다. 특히 헤게모니 프로젝트의 한 국민과 두 국민전략은 보다 유용한 통찰을 제공하는데, 제도주의적 복지국가유형이 한 국민전략과 연관되어 있다면 잔여주의적 복지국가유형은 두 국민전략과 연관되어 있다.

한편 본 논문은 웰렌스키와 르보(1965) 및 미쉬라(1981)와 복지국가 유형 논의에 기대어, 잔여주의, 제도주의, 사회주의 등의 세 가지로 복지국가 유형을 나누고 이에 상응하는 복지의식은 잔여주의형 복지의식, 제도주의형 복지의식, 그리고 사회주의형 복지의식으로 본 논문은 규정하고자 한다 (<표 1> 참조).

<표 1> 복지국가유형에 따른 복지의식 유형과 그 특징

국가유형 및 의식의 특징		복지의식유형		
		잔여주의 형	제도주의 형	사회주의 형
복지국가유형		잔여주의	제도주의	사회주의
복지의식의 특징	복지국가의 정당성(개입)	최소수준	적정수준	전체적 (국가 독점적)
	연대의식(조세납부)	낮음	보통	높음
	복지수혜의 성격	시혜 또는 자선	권리	권리이자 사회의 규범으로 인식

그리고 이들 복지의식을 구분하는 척도(또는 기준)로 본 논문은 세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개입의 문제: 시장과 가족인가 아니면 국가의 책임인가? 둘째, 조세납부에 대한 문제: 연대성의 관점에서 복지를 이해하는 것인가, 개인의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할 것인가? 셋째, 복지수혜에 대한 문제: 권리로서 이해할 것인가? 시혜로서 이해할 것인가?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방법을 혼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양적 연구의 경우 영국에서 행해진 기존 통계를 활용한 반면, 질적 연구의 경우 문헌연구와 인터뷰를 통해 자료수집과 분석을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양적인 Data를 보여주는 두개의 통계자료를 활용했는데(<표 2>), 첫째, 1983년 설립된 'National Centre for Social Research'(NatCen)가 1984년부터 매년 발간한 영국사회태도보고서(British Social Attitudes Report)를 사용하였다. NatCen은 독립적인 리서치 기관으로서 설립이후 영국인들의 변화하는 가치, 믿음, 신념체계를 매년 조사해 왔으며, 이를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해오고 있다(<http://www.natcen.ac.uk/> 참조).

둘째, 본 연구는 1979년 이전의 복지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국제적인 여론조사 기관인 영국 갤럽(British Gallup)의 갤럽 국제 여론조사 (The Gallup international Public Opinion Polls) 중 1943-1975년 여론조사자료를 활용하였는데, 이것은 대처 이전의 복지의식을 대처 이후와 비교하는데 유용하다.

<표 2> 복지의식 통계자료

자료	연도	내용
갤럽 국제 여론조사	1947	국가역할 관련 자료
	1965	사회서비스 지출에 대한 태도
	1975	"
영국 사회태도 보고서	1989	국가비교연구 자료(Smith)
	1998	국가비교연구 자료(Taylor-Gooby)
	1986-2000	빈곤에 대한 인식 자료 (2001년 BSA자료 인용)
	1983-2001	세금과 복지지출에 대한 태도 통계 자료 (2002년 BSA 자료 인용)
	1999, 2004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자료 (2004 BSA 인용)

질적 인터뷰의 경우 시민단체 간부, 노동조합 간부, 간호사, NHS관련자, 정치인 등과 복지수혜를 받고 있는 일반인들 등 총 9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표 3> 참조). 인터뷰는 질문의 순서를 정하지 않았으나 주제에 초점을 맞춘 인터뷰(Focused Interview) (Robson, 1993, 157)와 일대일 대

면을 통한 심층인터뷰(In-depth or Unstructured Interview)에 의거했는데, 이것은 질적 연구에서 사용되는 자료수집의 주요한 방법이다(Legard 외, 2003, 138). 심층 인터뷰의 경우 모두 녹음되었고 녹음된 것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주요한 부분을 발췌하는 식으로 자료가 모아졌고 모아진 자료는 맥락에 따라 분석되었다.

<표 3> 인터뷰 대상자 명단

번호	이름	직위 또는 경력	인터뷰 일시 및 장소
1	Anne Little	시민단체 'Alzheimer Scotland' 간사	2007. 09. 20. 'Alzheimer Scotland' 에딘버러 지부 사무실
2	Wayne Thomas	노동조합, National Union of Mineworkers (South Walse 지역) 위원장	2007. 07. 05. 웨일즈 노동조합 사무실
3	Derek Noonan	NHS, Business Process Redesign Specialist	2007. 09. 06. 연구자의 연구실
4	Fiona Farris	Co-ordinator of the Ca(i)re Project in Eric Riddell Centre	2007. 09. 20. 질문지에 대한 서면 답변
5	Eric Clarke	지역구 국회의원(1992-2001)	2007. 04. 26. 스코틀랜드 광산박물관내 도서관
6	Rona McCall	간호사(District nurse)	2007. 05. 13. 대상자의 집
7	A	연금수급자, 70세	2007. 04. 25. 대상자의 집
8	B	자영업자이자 지역 로타리 클럽 회장	2007. 05. 22. 대상자의 집
9	C	장애자녀와 치매노인 가족 수발자	2007. 05. 29. 대상자의 집

* 참조: 인터뷰 대상자 모두 자신들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나, 본 연구는 일반인의 경우 사적비밀의 존중이라는 차원에서 익명으로 처리했다.

* '대상자의 집'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를 의미한다.

3. 복지국가유형과 의식의 괴리

복지국가유형의 변화: 제도주의에서 잔여주의로

1979년 총선 승리를 통해 집권한 대처정부는 대처리즘을 통해 사회변화를 모색했는데, 우선, 신자유주의에 기반해서 복지국가에 대해 총체적으로 공격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헤게모니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영국병과 경쟁력약화의 원인을 복지정책에서 찾았고, 이런 맥락에 노동조합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또한 강력한 민영화정책을 추구하여 많은 공공사업이 국영화 되었다. 한편, 대처정부에게 복지는 최소생활을 위한 선택적 안전망으로 개념이 축소되었고 복지영역에서도 민영화를 진행시켰는데, 그것은 사적기관에 의한 복지의 민영화와 시장기준이 도입된 다원적 복지체제가 선호되었다.

이러한 대처정부의 영국병 치료에 대한 강한 의지와 실천은 제습에 의해 '권위주의적 민중주의'로 평가받았다. 즉 대처리즘은 전후 사회민주주의적 합의에 대해 돌이킬 수 없는 파괴를 실행하기 위해 광범위한 전선에 걸쳐 사회세력들의 근본적인 재조정을 시작했다. 그것은 영국의 위기 (또는

영국병)에 책임있는 (사회주의, 관료주의, 복지주의, 노동조합 독재, 형벌적 과세, 범죄의 증대와 같은) 악들에 대한 대중동원이며, 시장력의 해방과 법앞에 자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규율화할 수 있는 강한 국가의 발전을 의미했다(Jessop, 1990, 133).

한편, 대처이후 집권에 성공한 신노동당도 화려한 수사와 상관없이 대처정부의 정책의 방향을 크게 훼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핵심적인 모토인 '제3의 길'의 맥락에서 블레어 정부는 생산과 분배, 교환수단의 공동소유를 규정하고 있는 노동당 당헌 4조의 개정을 착수했고, 노동조합을 조직적·체계적으로 배제했다. 또한 신혼합경제(new mixed economy)는 시장경제 원리의 강화와 규제완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고, '사회투자 국가'(social investment state)는 복지제공의 개선이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과 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Giddens, 1998, 178). 이러한 제3의 길의 구상은 뉴딜 사업에서 구체화되었는데, 이것은 국가복지에 의존하는 취약계층 가운데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은 복지명부(welfare roll)에서 빼내어 노동시장으로 편입시켜 복지지출을 줄이면서 동시에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높이겠다는 의도에 다름 아니었다. 이러한 "보수당정부의 근로복지연계복지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대규모일 뿐만 아니라 강력한 의무조항과 제재조치가 겸비된 것으로서 전통적인 노동당 노선과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김종일, 2001, 113).

복지의식: 제도주의형의 지속

1947년 영국인들의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완전고용과 적절한 삶의 수준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다(The Gallup international Public Opinion Polls, 1947). 또한 1965과 1975년의 사회서비스 지출에 대한 영국인의 응답을 살펴보면, 영국인들은 정부가 교육, 보건, 연금에 지출이 너무 적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영국인들은 전후 1975년까지 복지의 책임은 국가에 있으며, 국가는 이에 대한 지출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늘려야 한다는 경향이 강했다.

Taylor-Gooby(1998)의 연구는 이러한 영국인들의 태도가 80년대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데, 70-80년대 영국인들은 의료, 교육, 연금 등의 현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유지시키거나 증가시켜야 한다고 응답했다. Sefton(2003)의 연구 역시 80-90년대 영국인들은 공공서비스 지출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고 보고하였다.

1984이후 매년 발간된 "영국인의 태도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 흥미로운 것은, 1983년부터 2001년까지 영국의 복지에 대한 태도는 오히려 제도주의형 복지향향이 경향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1983년 이후 영국인들은 세금과 동시에 복지지출의 축소에 대해 10%미만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세금증대와 사회보장에 대한 지출의 증대에 대해 50% 이상의 지지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가 신자유주의 정부 하에서 위축되기 보다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Taylor-Gooby and Hastie, 2002). 다른 서구 복지국가들과의 비교연구들도 이러한 영국인들의 복지의식을 입증하고 있다. 이에 Papadakis와 Bean (1993)의 영국, 미국, 독일, 호주, 오스트리아, 이태리를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태도에 관한 비교연구, Smith(1989)의 헝가리를 사회주의 국가유형, 독일, 네덜란드, 이태리, 영국을 사회민주주의 국가유형, 미국과 호주를 자유주의 국가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들 나라들에 대한 복지태도에 대한 연구, Taylor-Gooby (1998)의 영국, 독일, 스웨덴의 비교연구 등은 영국인들이 세금을 더 내고, 사회공공지출을 늘려야 한다는데 대한 자신들의 지지를 철회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살펴본 영국인의 복지의식은 1980년대 보수당 정부의 복지국가유형의 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여전히 변화하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은 사회정책을 통한 국가개입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고, 복지국가의 작동을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낼 준비가 되어 있으며,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적 연대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45년 이후 복지국가가 부과한 제도에 따라 의무를 모두 이행해 왔기 때문에 복지는 당연한 자신들의 권리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제도주의형 복지의식은 영국과 다른 유럽국가들과의 비교연구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4. 괴리의 기원: 제도주의적 복지의식이 유지되는 이유

왜 영국의 복지국가 유형은 잔여주의적에서 제도주의적 유형으로 바뀌었는데, 의식유형은 잔여주의형으로 바뀌지 않았는가, 다시말해 왜 여전히 제도주의형 복지의식에 머물고 있는가? 본 연구는 그 기원이 세가지 측면, 구체적으로 첫째, 사회적 합의와 이에 대한 복지국가 계약 이행에 대한 영국인들의 정치적 태도 즉 복지제도의 확립과 이에 기반한 의무의 이행에 대한 권리의 요구, 둘째, 시민사회를 통한 시민권 의식의 재생산, 셋째, 복지제도의 유산 등에서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

우선, 영국인들의 제도주의형 복지의식은 전시 또는 전후합의(wartime or post-war consensus)라는 정치적 유산에서 기원한다. 전후합의는 기본적으로 정치영역에서의 합의로서 대처정부에서 파기되기 이전까지 노동당정부와 보수당정부의 경제적 사회적 정책과 사회정책에 대한 일정한 정치적 합의를 의미한다(Selden, 1991, 41). 이러한 전후합의는 노동운동의 협조와 시민들의 광범위한 지지에서 가능할 수 있었는데, 우선 노동조합은 1940년대 이후 “불평없고 매우 적은 보상을 가지고 매우 높은 수준의 책임을 지려고 했고”(Pelling, 1987, 222), 정부의 인력정책과 전쟁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자 했으며, 그 결과 정부와 깊은 협력관계에 있었다(Barnes and Reid, 1982, 165). 한편, 시민들의 의식은 전후합의가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원동력이었는데, 당시 조사에 따르면 그 당시에 영국인들은 일정한 사회주의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집합주의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Childs, 1986, 13; Dorey, 1995, 1), 따라서 자유방임주의에 기반한 보수당의 정책은, 당시 전쟁영웅이었던 처칠의 유명세에도 불구하고 거부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이들의 베버리지 보고서에 대한 열정적인 지지로 나타났다. 언론은 베버리지 보고서를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제목으로 기사화했고(Jones, 2000, 112), 베버리지가 언급했듯이 이 보고서는 ‘대중적인 열렬한 지지’(Public Boom)를 받았다(Beveridge, 1953, 319). 이러한 정치적 영역에서의 전후합의는 시민들에게 일정한 기여를 전제로 해서 성립되는 것이었다. 전후합의의 기본현장이었던 베버리지 리포트는 이것을 매우 명확하게 하고 있다(Beveridge, 1942, para., 274; para., 305). 이러한 기여의 원칙에 근거하여 짜여진 사회보장제도는 노동당 정부에 의해 그대로 실현되었다. 따라서 영국인들은 전후 사회계약에 따라 자신들은 의무를 다 이행해 왔고 이제는 정부가 자신들과의 약속을 지킬 차례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제도주의형 복지의식이 여전히 유지되는 이유는, 시민사회에서 전후합의가 확인되고 학습되고 그리고 토론됨으로써 끊임없이 자신들의 사회권에 대한 의식이 재생산되고 있는데서 찾을 수 있다. 베버리지 보고서가 나왔을 당시에도 시민들은 광범위한 토론을 통해 베버리지 정신과 정책을 공유하였고 이것은 곧바로 노동당에 대한 지지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시민사회에서의 토론, 교육과 학습은 여전히 각종 관련 단체를 통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이와 관련된 조직으로서 우선 노동조합을 들 수 있다. 노동조합은 1979년 이전까지 삼자협의를주

의나 사회적 코포라티즘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 그리고, 대처정부 이후 많이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국의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압력집단임을 부인할 수가 없다. 노동운동은 정치적·이념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광범위한 사회개혁에 대한 지지를 확대시켜 왔으며 복지국가의 축소에 반대하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 노동운동 외에 시민운동이 두번째 압력집단인데, 1950년대 이래로 종종 '빈곤에 대한 로비'(the 'poverty lobby')로 언급되는 복지집단(Welfare groups)이 복지국가의 수혜자들, 즉 연금수급자, 편부모가족, 정신적 육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 집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등을 동원하고 대표하고자 노력해 왔다(Coxall and Robins, 1994, 287). 이러한 클라이언트들의 운동(Client's Movement)과 일반 압력집단들은 복지서비스 삭감과 구조조정을 반대해 왔다. 1970년대에 복지서비스의 확대와 내용의 개선을 요구하는 수많은 자조집단들이 발전하였는데, 예를 들면, 영국의회급진파(Gingerbread), 클라이언트 연맹(the Claimant Union), 무허가거주자들의 운동(the squatting movement), 여성자조회(Women's Aid) 등이 이러한 사례들이다(Gough, 1979, 144).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의식이 온존하도록 지켜주는 버팀목은 복지 제도의 유산에서 찾을 수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영국은 1945년 이후 전후합의라는 정치적 유산과 마찬가지로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기구, 즉 제도적 유산을 가지고 있다. 전후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변형을 겪었을 지라도, 여전히 복지제도의 큰 틀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NHS는 의료의 질이 악화되어 왔고 부분적으로 민영화되는 길을 걸었을지라도, 세금방식에 기반한 전국민 무료 의료서비스 골격은 손상되지 않은 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NHS의 혜택을 한번이라도 경험 해 온 영국인들은 이것을 통해 복지국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체득해 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국가 제도 하에서 일하는 높은 복지관련 종사자들의 비율 또한 복지제도로부터 오는 일종의 영국사회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복지국가 등장 이후 전개된 제도의 성숙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지국가의 수혜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익집단들이 조직화되었다.

5. 함의와 시사점

이상의 연구로부터 우리가 발견한 것은, 대처정부 등장 이후 반복지주의를 담고있는 신자유주의를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헤게모니 블럭의 다차원적인 공격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에서 복지의식은 여전히 크게 훼손되지 않고 제도주의형 복지의식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이것의 복지제도 공격을 어느정도 막아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지배블럭의 헤게모니에 대해 시민사회에서 대항헤게모니를 개발하고, 이를 교육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또다른 복지정치의 실천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경우 이제 잔여주의적 복지제도를 형성해 나가기 시작한 시점에서 시민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반복지 의식과 반노조 의식은 복지국가 형성과 발전의 중요한 위협으로 존재할 수 있다. 즉 이것은 한국의 복지국가 건설이 기존의 반복지의 지배블럭, 지구화이후 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국내외 금융자본, 기존의 관행과 제도에 대한 투쟁 이외에 시민사회 수준에서의 대항헤게모니를 향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것을 제습의 용어로 옮기면, 한국의 복지정치와 복지동맹 세력은 피지배 사회세력의 특정한 이익의 실현과 일반국민들의 일반적, 장기적 이익을 도모하는 '국민적-대중적' 프로그램의 추진을 성공적으로 연관시키는 프로젝트의 개발에 노력해야 함을 의미한다(Jessop, 1990, 303).

참고문헌

- 김종일, (2001), 『복지에서 노동으로: 노동중심적 복지국가의 비판적 이해』, 일신사
- Barnes, D. and Reid, E., (1982), 'A new relationship: trade unions in the Second World War', Pimlott, B. and Cook, C.(eds), *Trade Unions in British Politics*, Longman Group Limited
- Beveridge, W., (1942),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 HMSO, Cmd. 6404
- Beveridge, W., (1953), *Power and Influence*, Hodder & Stoughton
- Childs, D., (1986), *Britain since 1945: A Political History(second edition)*, Ernest Benn Limited
- Dorey, P., (1995), *British Politics since 1945*, Blackwell Publishers Ltd
- Giddens, A., (1998), *The Third Way: The Renewal of Social Democracy*, 한상진, 박찬욱 역, (1998), 『제3의 길』, 생각의 나무
- Gallup, G. H., (1977), 'Public Opinion Poll (1947; 1965; 1975)', Gallup International Public Opinion Polls: Great Britain, 1937-75, Greenwood Press, London
- Gough, I., (1979),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Welfare State*, Macmillan Press Ltd
- Gramsci, A., (1971), *Selections from the prison notebooks of Antonio Gramsci*, Lawrence & Wishart
- Jessop, B., (1990), *State Theory: Putting the Capitalist State in its Place*, 유범상, 김문귀 역, (2000), 『전략관계적 국가이론』, 한울
- Jessop, B., Bonnett, K., Bromely, S. and Ling, T., (1988), *Thatcherism: A Tale of Two Nations*, Polity Press
- Johnson, P.(ed.), (1994), *20th Century Britain: Economic, Social and Culture Change*, Addison Wesley Longman Limited
- Lebeaux, C. N. and Wilensky, H. L., (1965), *Industrial Society and Social Welfare*, The Free Press.
- Legard, R., Keegan, J. and Ward, K., (2003), 'In-depth Interviews', Ritchie, J. and Lewis, J. (eds), *Qualitative Research Practice: A Guide for Social Science Students and Researchers*, SAGE.
- Mishra, R. (1981), *Society and Social Policy: Theories and Practice of Welfare*, Macmillan.
- Papadakis, E. and Bean, C., (1993), "Popular Support for the welfare State: A Comparison between Institutional Regimes", *Journal of Public Policy*. Vol.13, No.3
- Pelling, H., (1987), *A History of British Trade Unionism(fourth edition)*, Macmillan Press Ltd
- Robson, C., (1993), *Real World Research: A Resource for Social Scientists and Practitioner-Researchers*, Blackwell
- Sefton, T., (2003), 'What we want from the welfare state', Park, A. [et al.](eds.), *British Social Attitudes (20th Report)*, SAGE
- Seldon, A., (1991), 'The Rise and Fall of the Post-war Consensus', Jones, B. (eds.), *Politics UK*, Philip Allan
- Smith, T. W., (1989), 'Inequality and welfare', Jowell, R. [et al.](eds.), *British Social Attitudes(6th report)*, Aldershot : Gower
- Taylor-Gooby and Hastie, (2002), 'Support for state spending: has New Labour got it right?', Park, A., [et al.](eds), *Brithish Social Attitudes(18th report)*, SAGE
- Taylor-Gooby, P. (1998), 'Commitment to the welfare state', Jowell, R., [et al.](eds), *Brithish-and Euproean-Social Attidues(15th report)*, Ashgate